

# 민선 8기 전북도 혁신 4년의 '성과 혁혁'

### 산업 혁신·대규모투자 유치·복지·교통 개선으로 전북 대전환 실현... 전북 미래 성장 기반·지역 경쟁력 강화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4년 동안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기치로' 산업과 경제, 복지, 교통, 농생명 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나후와 인구감소, 산업 침체라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다."

가장 큰 성과는 산업구조 혁신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 이후 침체됐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30억 규모 투자협약과 현대로템의 항공우주 분야 투자 등을 포함해 모두 27조 5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국내 핵심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드론과 무인수상정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국방산업 육성의 기반까지 확보했다.

바이오와 농생명 산업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도내 6개 시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로 지정됐고, 국내 최초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용 기반 시설을 구축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도 본격화했다.

전북은 행정 체계에서도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지난해 128만 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특례를 확보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도 소상공인 특



지난 2월 27일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SI시티투자협약식.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례보증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도 눈에 띈다.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인 '반값 주택'을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였으며, 찾چه 아이 출산 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도 시행했다. 전북형 무상보육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출생아 수는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복지와 의료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복지에 이어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센터를 운영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과 서남권 소아 진료 기반 확충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율방

재단을 대폭 확대해 4년 연속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다. 심장지 환자의 자발 순환 회복률도 크게 향상되는 등 응급 의료체계 역시 개선됐다.

농업과 농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어졌다. 새만금에는 웰프 산업단지와 K-푸드 수출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본격화했다. 순창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진됐고, 전국 최초 어업 잠수사 시험사업도 조래 예정과 자유 방목형 한우 동물복지 인증 등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도 시행됐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전북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전주가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면서 국제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남북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됐다.

도민과의 소통도 확대됐다. 53년 동안 폐쇄됐던 도시사 관사를 문화공간인 '하얀 양옥집'으로 개방해 1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대표 문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고군산 섬 잇길'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년간 산업과 경제, 복지, 교통, 농생명,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길이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전북의 변화는 나후 지역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미래 첨단산업과 특별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2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선의원 직무연수.

## 초선의원 대상 '찾아가는 직무교육' 실시

### 전북도의회, 의원·직원 등 60명 참석...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무 교육에 나섰다.

도의회는 29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초선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의정 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무원의 출장 등 부당한 의회 운영 기준을 확립해 초선의원들의 자치 입법 및 재정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을 주제로 지방자치시대 의회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 제10대 정읍시의회 당선자 상견례·의정설명회

정읍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0대 의원 당선인 17명을 대상으로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는 오는 7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둔 제10대 정읍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회 사무규 주요 추진업무와 의사일정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으며, 의원 전담등록과 겸직 신고, 청렴 의무 등 의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오는 7월 7일 제 314회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정단을 선출한 뒤 개원식을 개최하고,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선9기 전주시정 로드맵 완성도 높인다

###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 중간 점검 나서

민선 9기 전주시정 로드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간 점검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지훈 당선인과 함께 토론 형식의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위원회 출범 이후 각 분과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정책과 공약의 추진 진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시정 혁신, 경제·산업, 문화·예술, 돌봄·복지, 도시·환경 등 5개 분과와 재정 혁신 도시 전주, 기업 친화 도시 전주, 세계 영화 도시 전주 등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 검토 대상이었던 88개 공약에 신규 과제를 더해 모두 100개 공약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다.

위원회는 공약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위원장 주제 분과장 회의와

실무자담단 회의를 진행했으며, 시정 혁신분과 13회, 경제·산업 분과 16회 등 모두 95차례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장애인단체 등과 6차례 간담회를 열고 5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하정우 전 청와대 시대기획수석을 초청한 정책 특강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열린 전주 소통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중간 점검 회의 이후에도 현장 방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정책을 수정·보완해 민선 9기 시정 로드맵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안국찬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정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지만 무엇보다 재정이라는 큰 과제가 쉽지 않았다"며 "열린 시정을 통해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재경전북도민회 전·현직회장협의회 정기총회

### 수도권 출향도민 100여명 참석... 전북 주요 현안 공유·협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전·현직회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성홍수 협회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출향도민 100여 명이 참석해 고향 발전과 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정기총회는 출향도민 간 연대를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주요 도정 현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회기 주요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도민회 활성화와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고 고견과 삶의 지혜는 도정 운영의 든든한 나침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 전북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출향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전북 발전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홍수 협회회장은 "몸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 정북인이라는 자부심은 한 순간도 잊을 적이 없다"며 "전·현직 회장협의회는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와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국가 미래산업 지도에 전북은 없나?”

### 민선9기 도지사직 인수위 정부 메가투자 강력 반발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가 정부와 대기업이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AI 산업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산업 지도에서 전북의 존재가 사라졌다"며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총 1,461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광주·전남에는 서남권 메모리 반도체 팹 구축에 800조 원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에는 단 한 건의 대형 투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소외에 이어 이제 국가 메가 프로젝트에서

도 배제되는 4중 소외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5일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균형 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광주·전남 중심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며 "서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혜택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는 전북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넓은 산업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융합타운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용 수 공급 능력,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과 인력양성 체계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임지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비교와 검토도 없이 광주·전남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전북 패싱이자 지역 차별"이라고 강조

했다. 정부가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대기업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투자 보고회를 개최하면서도 전북 관련 일정은 마련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원회는 "전북은 미래 국가 전략산업 논의 과정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와 피지컬 AI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통해 전북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이번 투자 계획에서 핵심 하드웨어와 데이터 거점을 영남권에 집중 배치한 것은 전북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35년까지 전국에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550조 원

투자 계획에서도 전북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계획 어디에도 전북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철저한 배제이자 묵살"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전북을 다른 지역 대형 사업의 대리자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5극 3북"의 독자적인 경제권 역으로 인정하고 그 위상에 걸맞은 대규모 국가 투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미래 첨단산업 투자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이끄미' 위촉·발대식 개최

###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 외국인 12명 위촉... 전북 정착 선배가 멘토 역할 수행

### 모국어 생활정보 제공·비자 멘토링·SNS 홍보 등 외국인 눈높이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인재들이 새로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민간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지난 28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이끄미 발대식을 열고, 도내 외국인 인재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의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이 직접 정착을 알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참여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촉된 이끄미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12명으로, 베트남·네팔·스리랑카·중국·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 6개국 출신이다.

이들은 전주·정읍·김제·고창·부안 등 도내 5개 지역에 거주하며, 다문화 활동과 통역 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과의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지역특화형 비자와 전북 생활정보를 모국어 제자·홍보하고,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홍보, 생활정보 번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